



|   |              |  |   |   |  |
|---|--------------|--|---|---|--|
| <br><b>인천광역시</b> |              | <b>보 도 자 료</b>   |   | <br><b>인천의꿈*</b><br><b>대한민국의미래</b> |  |
| <b>배포일자</b>   |              | 2023년 1월 15일(일)<br>총 6매  |   |   |  |
| <b>담당 부서</b>  | <b>수 산 과</b> | <b>담당자</b>   | · 수산정책팀장 송병훈 ☎ 440-4851<br>· 담당자 배주승 ☎ 440-4852 |   |  |
| <b>사진(이미지)</b>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b>참고자료</b>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  |
| <b>보 도 일 시</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시, 어촌에 새로운 활력 불어 넣는다**

- 수산물 공급, 어촌 정주여건 개선위해 어촌·수산 예산 770억 확보 -

- 어항기반구축, 어업지도선 건조,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과 어촌 어업인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어촌·수산분야에 지난해 보다 124억원, 19.1%가 늘어난 총 7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어려운 국내 여건에서도 시는 어촌뉴딜 300사업 2단계 5개소를 90% 공정율을 진행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원 범위를 전 도서 및 접경지역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서해5도서 및 접경해역의 어장확장, 조업시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어업인 조업여건 개선에 노력했으며, 연안 어장의 자원증강을 위해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 조성(인공어초 28ha/307개), 종자방류(517만미)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해양생태계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가공, 냉장·냉동 시설지원, 수산물 상생할인(30% 할인), 전통어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행사(국비 964백만원) 등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인천어촌특화센터에서는 어촌마을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강화군 홍왕꽃게탕(가정간편식), 옹진군 영암바지락 고추장찌개(가정간편식), 연평꽃게 육수팩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특화상품을 개발해 해양수산부 주관 성과 평가회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어촌·섬 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사회적 구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❶어촌 신(新) 활력 증진사업 ❷어항 기반시설 구축 ❸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❹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 ❺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활성화 사업의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❶ 어촌 신(新)활력 증진사업을 통해 어업인 삶의 질 향상**

인천시는 2024년까지 강화군, 옹진군, 중구의 어촌지역 16개소에 총 사업비 1,644억원 규모의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5개소)을 완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74%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단계 사업(5개소)은 전체 공정률 90%를 달성했다. 또 3단계 사업(3개소)은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으며, 4단계 사업(3개소)은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수부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모로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에 지난해 주민, 수협, 군·구 협의를 통해 사업대상지 4개소(강화군 1, 옹진군 2, 중구 1, 사업비 500억]를 발굴해 공모 신청했으며, 최소 3개소 이상 선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② 어항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과 태풍·월파로 인한 피해 예방과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기반시설 구축 및 안전한 어항을 건설한다.

지방어항 건설사업은 3개항(후포항, 소연평항, 광명항)에 65억 원, 어항 보수·보강사업은 4개항(주문항, 진두항, 답동항, 대무의항)에 33억 원,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은 강화군 5개항에 7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어항 유지·보수사업에도 8억 원을 편성해 안전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 ③ 어업지도선 건조 및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업무를 수행할 어업지도선이 노후(선령27년)됨에 따라 옹진군 1척을 필두로 5년간 5척을 대체 건조 한다.

그동안 국비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재원 확보가 곤란했으나,

올해는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해 100톤급 어업지도선 건조를 추진한다.

또한, 강화·옹진군 접경해역 등에 대한 열악한 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접경해역 어장 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을 해수부와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강화 해역(창후항 인근) 조업한계선 일부 조정을 요청해 어선들의 불가피한 위법 사항 등을 개선 할 예정이며, 만도리 어장 등에서 조업 시 어선들의 성어기 야간 입·출항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허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돼 어선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어선어업용 유류비를 지원하고자 예산 20억 원으로 기름값 구입가액의 5~10%, 톤급별 300~600만 원까지 지원해 어업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 **④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바다 조성**

수산종자 방류 및 산란·서식장 조성을 통해 이상기후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에 대비하고, 특히, 자원 조성 과 어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실시한 수산종자·종패 방류사업에는 올해 역대 최대 사업비인 23억 3천만원을 투입한다.

또한, 인공어초시설 사업(18억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사업(3억원)으로 연안어장의 생태계 복원에 나서고, 방류효과조사·어초어장관리(5억원) 사업비를 편성해 체계적인 효과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산물종자 방류 및 인공어초 효과조사 결과에 따르면 꽃게 6.14배, 넙치 2.72배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공어초 시설 지역에서는 꽃게, 조피볼락, 쥐노래미 등 어획량이 약 2~4배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외에도 노후화된 어장환경 개선 및 어업생산 기반 조성(21억1천만원)을 통해 양식어장 환경개선·보전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에 기여할 계획이다.

## **⑥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활성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30억 원)을 위해 현지에서 생산된 수산물(갑각류 및 패류, 어류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지원으로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촉진(21억 원)을 위해서는 수산물 포장용기와 저장용기 제작 지원과, 유통 물류비 지원, 관광상품 개발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급할 예정이다.

어촌특화지원센터운영과 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을 위해 7억 원의 사업비로 어촌계의 특화상품 개발과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접근성이 편리한 어촌체험휴양마을 7개소를 대상으로 조개캐기·해상낚시·통발체험·갯벌마차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과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구감소 및 사회구조 변화에 취약한 어

촌 및 섬·연안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고자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게 도심지 개발사업 중심이 아닌 어촌과 어업인도 소외받지 않는 지원 정책과 어촌·어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고 말했다.